

---

- 제3기(2023~2027) -

#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(안)

---



**광주광역시**  
(민주인권과)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기본계획 개요 .....              | 1  |
| II . 국내외 현황 및 우리시 인권정책 .....   | 3  |
| III . 제3기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.....    | 7  |
| IV . 분야별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추진계획 .... | 10 |
| 1.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.....            | 10 |
| 2.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.....         | 20 |
| 3.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 .....          | 25 |
| 4. 인권제도와 인권행정 강화 .....         | 29 |
| 5. 인권도시 위상제고 .....             | 32 |
| V . 인권도시 추진체계 구축 .....         | 34 |

# - 제3기(2023~2027) -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(안)

시민의 인권보장 및 ‘내☆일이 빛나는 인권도시 광주’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3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보고드립니다

## I 기본계획 개요

### 1 배경과 목적

#### ① 배 경

- 기후위기,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, 신과학기술 등장 등 각종 재난상황과 노동 및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권보호체계의 재구축이 시급
- 국제 인권의제,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, 광주인권헌장, 민선8기 시정 방향, 지역의 인권현황 등을 고려한 전환기의 새로운 인권정책 및 도시운영 전략을 담은 인권종합계획 필요

#### ② 목 적

- 민선 5기 이후 ‘인권도시 광주’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, 단위별로 운용되고 있는 인권 규범, 제도, 정책 등을 재구성해 우리시 인권정책과 인권도시운동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인권 비전 수립
- 제2기 인권기본계획(’17 ~’21)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시민의 인권증진과 ‘인권도시 광주’의 도시운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‘3기 인권 기본계획’ 수립

⇒ 기후위기, 인구구성 변화,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경제 및 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, 상위법 및 광주시 인권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지역단위 인권보호체제 구축하고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

## 2

## 수립방향

- 제3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방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고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 제공

### 〈제3기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〉

- ▶ 수행기간 : 2022. 3. 21. ~ 12. 10.(9개월)
- ▶ 수행기관/계약금액 : 광주전남연구원 / 62,363천원(시비)
- ▶ 주요내용 : 추진배경, 기본계획 개요, 인권도시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등

- 제1, 2기 계획을 인권제도, 인권정책, 인권문화, 인권연대 등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최근의 인권의제, 인권의 미래 환경, 광주의 인권지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‘인권증진과 인권도시운영’을 통합한 제3기 인권기본계획 수립
- 기후위기, 인구구성 변화,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경제 및 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, 상위법 및 광주시 인권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단위 인권보호체제 구축 기여

### <제3기 인권기본계획 구성 체계>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획의 확장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기 인권기본계획과 연계 및 확장</li> <li>- 인권의 최근 의미와 이슈 반영</li> <li>- 국제적 규범·국내 상위법과 연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
| 체계의 완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주시 인권헌장-인권지표-인권정책 간 연계</li> <li>- 인권지표·핵심지표 개선</li> <li>- 인권증진+인권도시운영 통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계획의 실효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행연구·관련 자료 분석</li> <li>- 인권증진시민위원회, 전문가 등의 참여형 비전·전략 수립</li> <li>- 사회적 약자 등 관련 당사자 인터뷰로 과제 도출</li> </ul> |

## II 국내외 현황 및 우리시 인권정책

### 1 국내외 현황

#### ■ 국외 현황

##### ① 유엔 인권이사회 '지방정부와 인권' 보고서

-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, 2015년 9월 제21차 회기에서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자문위원회의 '지방정부와 인권' 보고서 공식채택함
- 2020년 결의안은 COVID-19 팬데믹에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인권을 준수하면서 대응해 온 과정을 강조하고, 평등권, 비차별, 그리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

##### ② 유엔 지속가능발전과 인권

- 2015년 9월 제 70차 UN 총회에서 '2030 지속가능발전의제(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)' (이하 'UN 2030의제')가 채택
  - UN 2030의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; 이하 SDGs)와 169개 세부목표(target),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사회·환경·경제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달성을 추구함
- SDGs에서 인권은 기본 관점에서 전제조건으로, 도시발전에 있어 인권기반 접근을 강조

##### <SDGs에서 인권관련 세부목표>

| 인권영역         | SDG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경제·사회·문화적 권리 | SDG 1(빈곤), 2(기아), 3(건강), 4(교육), 6(식수), 8(일자리) 등            |
| 정치적·시민적 권리   | SDG 16번 세부목표 16.3(법치), 16.10(알권리와 기본적 자유) 등                |
| 평등과 비차별      | SDG 5(성평등), 10(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), 4.7(성평등 교육), 16.b(비차별 법과 정책) |
| 인권교육         | SDG 세부목표 4.7(세계시민교육, 인권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과 인권       | 2030 의제 제67항 (기업과 인권 이행지침, Guiding Principles on BHR)      |

## 국내 현황

### 1 국가차원의 인권계획

-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, 이하 ‘인권NAP’)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, 인권 관련 법·제도·관행을 개선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인권NAP는 5년 단위로 수립하며 2007년 1차를 시작으로 현재는 제3차 기본계획(2018~2022)이 시행중
-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인권정책의 기본원칙으로 “인권존중, 평등과 차별금지, 민주적 참여”라는 원칙 제시
-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8개의 정책목표와 272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음
  - 정책목표는 ▲모든 사람의 생명·신체 보호 ▲모든 사람이 평등 ▲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▲모든 사람의 정의 실현 참여 ▲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 ▲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▲인권의식과 인권문화 ▲인권친화적 기업활동

#### <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구성>

| 인권정책의 기본원칙 : 인권존중, 평등과 차별금지, 민주적 참여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↑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책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역                      |
| 모든 사람의 생명·신체 보호(25개)                | 생명권(자살예방 체계) 등<br>안전권   |
| 모든 사람이 평등(12개)                      | 차별금지(차별금지조례)            |
|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(23개)                  | 거주이전-이동권                |
| 모든 사람의 정의 실현 참여(8개)                 | 다양한 구성원의 대표성 확보         |
|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(93개)             | 노동권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, 주거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권 및 보건·환경에 대한 권리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을 받을 권리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·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(돌봄)        |
|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(69개)      | 여성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·청소년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인(고령화)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주민 지원과 사회통합(북한이탈주민 포함) |
| 인권의식과 인권문화(32개)                     |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          |
| 인권친화적 기업활동(10개)                     | 기업과 인권(인권경영·인권영향평가)     |

## ② 국가인권위원회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(2018~2020)

-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중장기적 업무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‘인권증진 행동계획’이란 명칭의 3개년 중기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이래, 5차례(제1기: 2006~2008, 제2기: 2009~2011, 제3기: 2012~2014, 제4기: 2015~2017, 제5기: 2018~2020)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
-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은 국내 인권환경이 ▲양극화의 구조화 ▲교육 양극화 ▲노동시장 양극화 ▲청년세대 위기 ▲노인빈곤 ▲노인자살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2대 핵심목표와 2대 추가목표 제시

### <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 주요목표>

| 전략목표                   | 성과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 | 1.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차별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3.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4.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5.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               |
| 2. 차별해소를 통한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| 6.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7. 장애인 등의 탈시설(사회복귀) 및 정보 등 접근권 제고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8. 이주민·난민의 인권보호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9.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0.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         |
| 3. 지속가능한 인권거버넌스 구축     | 11.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2.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3. 시민사회 협력 강화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4.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 기준 국내 이행 강화  |
| 4.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       | 15.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6.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7.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강화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8. 생명·안전,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9.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                |
| 특별사업                   |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             |
| 기획사업                   | 위원회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| 제1기 인권기본계획<br>(2012~201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기 인권기본계획<br>(2017~202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 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1기 인권기본계획(2012~2016)은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과 인권도시운영 계획의 성격을 모두 담고 있지만, 상대적으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와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구성</li> <li>▶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 내용은 100대 인권지표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인권도시 육성계획에 맞추어져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제1기 기본계획이 포괄적인 ‘인권도시’ 운영 전략 수립에 무게를 두었던 점을 감안해 1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상</li> <li>▶ 새로운 비전 아래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광주시가 추진해야 할 인권정책과 도시운영 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통합계획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한 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인권도시 기본계획 사이에서 뚜렷한 자기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100대 인권지표개발을 핵심내용으로 삼아 구성 체계 불균형</li> <li>▶ 지방정부 최초의 종합인권기본계획으로서 ‘인권도시’ 정책(운동)을 촉발시켰고, 다른 지역의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주요한 기준이 됨</li> <li>▶ ‘인권도시’ 상징화(브랜딩) 등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인권증진 목표와 추진과제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못함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각의 추진과제에 대한 전체 부서 단위의 수용력은 높아졌지만, 주요한 인권제도인 인권지표, 인권헌장 등과의 연계성은 여전히 부족</li> <li>▶ 인권정책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고,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과제 실행에 대한 부서 간 협력이 미흡</li> </ul> |

## &lt;2020년 연차별 실행계획 상의 분야별 인권과제 현황&gt;

| 구분<br>(계) | 사회적약자 인권증진 |    |    |     |            | 인권제도<br>인권행정<br>강화 | 인권<br>공동체<br>문화형성 | 인권협력<br>체계구축 | 인권도시<br>위상강화 | 광주인권<br>현장실천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장애인        | 노인 | 여성 | 이주민 | 어린이<br>청소년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17       | 35         | 9  | 3  | 16  | 11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| 3            | 32           |

## 1

## 비전

- “시민참여와 공존으로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광주”
- ‘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광주’는 광주가 직면한 다층적인 인권 도전 과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권제도를 강화하고
  - 인권의 주체인 시민의 인권역량을 증진시켜 광주의 인권활동의 효과가 시민의 삶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성장하는 도시 지향

<광주시 인권기본계획의 비전의 의미 변화>

| 구분 | 제1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전 | “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“시민을 품고, 세계와 연대하는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”                | “시민참여와 공존으로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광주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미 | 공감은 인권의 핵심 구성 가치이고 창조는 인권도시 발전의 원리라는 점에서 인권도시가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을 강조 | 시민의 인권적 삶을 강조, 시민의 다양한 구성과 지역이 연대하는 인권도시의 운영 방향 제시 | 인권도시의 총체적 역량을 시민참여라는 인권활동으로 강화하고, 인권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이 공존함으로써 인권도시의 안정성과 지속력 제고 |
| 목표 | 인권도시 조성/제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권도시 운영/주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권도시 확장/문화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략 | 행정기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민실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인권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

## 추진전략

### ①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

- 인권은 누구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,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
  -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삼은 계층은 장애인, 노인, 여성, 아동·청소년, 이주민 등임

### ②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

- 도시의 공간과 물질적 자원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동등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
  -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주요 권리 영역은 공간권, 안전권, 문화권, 환경권, 정보접근권으로 설정

### ③ 지역사회 인권강화

- 인권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역량은 의무주체의 정책적 역량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권실천 역량이 결합되어야 함
  -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참여에 의한 인권의 주체화,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인권문화 형성 등이 중요

### ④ 인권제도 및 인권행정 강화

- 인권 관련 규범·제도·장치를 고도화하고 행정의 인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운영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인권도시로서의 지속가능성 제고
  - 인권영향평가, 인권지표 등 대표적인 인권제도를 개선하고, 인권행정에서 협력적 체제 구축

### ⑤ 인권도시 광주 위상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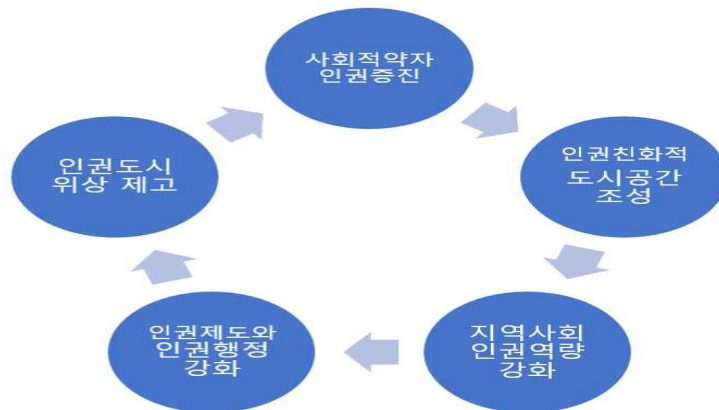
- 인권도시의 실질적 위상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의 선도적 책임 역량강화
  - 인권도시운동과 인권정책에서 지역 간 연대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고, 지구적 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한 담론을 창출하는 역할 수행

<제3기 광주시 인권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>

비전

시민참여와 공존으로 모두가 누리는  
「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광주」 조성

5대  
목표



추  
진  
전  
략

| 사회적약자<br>인권증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권친화적<br>도시공간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사회<br>인권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권제도와<br>인권행정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권도시<br>위상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 사회 참여가 보장</li> <li>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</li> <li>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</li> <li>이주민 인권 인식 개선</li> <li>아동청소년 분야 안전 및 인권강화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 -유니버설 디자인 추진</li> <li>재난과 위험 대응 기반 강화</li> <li>문화권 및 환경권 사업 지속 확대 추진</li> <li>행정정보 공개 실질화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활 속 인권 문화 확산</li> <li>인권정책 민관 협력체계 내실화</li> <li>광주인권교육 협의회 구축</li> <li>지역 대학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영향평가 체제 재구축</li> <li>광주 인권지표 수정 및 보완</li> <li>광주시 인권 행정협치회 구성</li> <li>광주시-5개 자치구 인권 행정협의회 운영</li> <li>인권지원센터 설치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 인권도시 연대회의 구성 운영</li> <li>세계인권도시 포럼을 통한 지구적 차원</li> <li>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 사업 확대</li> <li>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기반 확대</li> </ul> |



### 장애인 분야

- ‘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2023~2027)’ 중 장애인 인권 관련 권고 주요내용
  - 소규모시설로의 전환, 재가 장애인의 자립 지원 포함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
  -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개선
  -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, 자립생활 지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
  - 정신장애인 시설 이용 욕구 실태조사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복지체계 구축
  -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강조하고 장애인 후견제도를 ‘의사 결정 지원’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
- 제3기 광주시 인권기본계획의 장애인 분야 인권 정책의 방향은 장애인 ‘삶의 질(well-being)’을 높이기 위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은 장애인의 ‘욕구 중심’에서 ‘권리 중심’으로 전환
  - ‘UN장애인권리협약’, ‘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’, ‘민선8기 공약 및 인수위 보고서’ 등에서 공통적으로 ‘권리 중심’ 지원 강조
- 다양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 생활 및 인권수준을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
  -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 욕구, 건강권, 인권 실태조사
-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 마련
  - ‘장애인 친화도시’라는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‘포용 광주’를 구축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참여 필요

<장애인 분야 추진과제 종합체계>

| 추진<br>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핵심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<br>료<br>시<br>민<br>으<br>로<br><br>동<br>등<br>한<br><br>일<br>상<br>을<br><br>누<br>릴<br><br>권<br>리<br><br>보<br>장 | 물리적·사회적<br>장벽이 없고 참<br>여가 보장되는<br>도시 조성    |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이<br>가능한 환경 만들기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대</li> <li>○ 중점관리대상사업 지정</li> <li>○ ‘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’ 운영 개선</li> <li>○ 교통정책 결정과정에 당사자 참여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접근에서 배제되지<br>않는 환경 만들기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청각장애인 정보접근 보장</li> <li>○ 발달장애인 정보접근 보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<br>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장애인복지위원회’ 강화</li> <li>○ 인권지표에 장애인 정책참여율 추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사회에서 차<br>별 없이 함께 살<br>아갈 수 있는 기<br>반 조성 |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생<br>활의 권리 보장하기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지원주택 공급 조례’ 제정</li> <li>○ 탈시설 과정에 대한 중단연구</li> <li>○ 중점관리대상사업 지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동할 권리와 노동자로<br>서의 권리 보장하기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만들기</li> <li>○ 장애인 노동실태조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<br>지원과 인권보장 강화하기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신장애인 복지·건강권·인권 실태조사</li> <li>○ 정신장애인 당사자 지원 확대</li> <li>○ 정신장애인 자립주택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<br>구제와 이중차별 해소하기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여성 특성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</li> <li>○ 건강권·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</li> <li>○ 공공의료원 등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간다운 삶과<br>사회적 돌봄이<br>가능한 환경 조성            |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<br>누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</li> <li>○ ‘시청각중복장애인’ 실태조사</li> <li>○ ‘내부기관의 장애인’ 실태조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신이 원하는 돌봄을<br>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</li> <li>○ 루게릭 등 희귀질환 사각지대 해소</li> <li>○ 보호종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<br>지원 기반 만들기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’ 제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하고 창의적<br>삶을 위한 지원<br>강화                 |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<br>조성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건강권·의료접근권 보장 조례’ 제정</li> <li>○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원체계 구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 문화·예술·체<br>육 활동 지원 확대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 활동 맞춤형 지원</li> <li>○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습하고 경험하며 생활하<br>도록 평생교육 권리 보장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인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</li> <li>○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<br>내실화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권·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모니터링</li> <li>○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노인 분야

- 민관 협력을 통해 노인 복지 관련된 장기계획이 마련되고 있음
  - ‘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’제정(2019. 3.)
  -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(2020-2022) 기본계획 방침(2020. 1. 31.)
  - WHO(세계보건기구)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(2020. 3. 9.)
  -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사회활동 참여규모 확대, 노인일자리 참여 규모는 2019년 21,563명에서 2020년 27,584명, 2021년 27,575명임
  - 장년층의 인생 2막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‘빛고을50+센터’개관 및 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령층 전 세대부터 선제 지원
  - 문화·여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. 노인회관 2021년 건립,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(2022년)
- 노인학대나 차별, 소외 등의 소극적 인권보호 정책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권리 기반에 근거한 적극적인 노인인권 정책 마련 필요
- 노인 당사자의 인식 전환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
- 노인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주체적인 인권의식 함양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실천적인 제도 미비
-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노인인권 거버넌스 구축 필요.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인권 정책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총괄하는 고령화전담기구 및 전문가 배치 필요
  - 광주복지연구원 내 노인인권 관련 자문(지원)과 인권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
  -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반복적으로 인권침해 문제 발생하고 있고,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권 사각지대
  -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거나,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제거하는 활동
  -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

<노인 분야 추진과제 종합체계>

| 추진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핵심 과제                   | 세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노인이<br>존중받는<br>삶과<br>노후가<br>완전한<br>권리 보장 | 건강하고<br>존중받는 노후         | 인권 침해 예방 및<br>노인인권 증진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</li> <li>○ 인권침해 없는 시설 운영</li> <li>○ 노인학대 예방 증진</li> <li>○ 노인인권 증진 문화 확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르신 건강증진 및<br>춤춤한 돌봄 서비스<br>제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의 정신건강 지원 확대</li> <li>○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</li> <li>○ 노인 무료식사 질 높이기</li> <li>○ 춤춤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합돌봄 및 치매관리 체계 구축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인안전 친화도시<br>조성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안전사고 예방</li> <li>○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 삶이<br>보장되는<br>당당한 노후 | 노인가구 주거복지<br>지원 강화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 검토</li> <li>○ 고령자 주택과 시설 개보수 지원</li> <li>○ 최저주거복지기준선 마련 및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년의 삶에 대한<br>재설계와<br>일자리 활동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년의 삶에 대한 재설계 종합 지원</li> <li>○ 노인일자리 활동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樂이 있는<br>활기찬 노후         | 어르신<br>여가·사회활동<br>활성화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을단위 거점복지관 조성</li> <li>○ 선배시민 인식전환</li> <li>○ 노인 인권지도자 육성 및 활동강화</li> <li>○ 고령자 다수 직종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디지털 정보화<br>수준 향상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년층 디지털 정보교육 기회 강화</li> <li>○ 노인층 스마트폰 구입 및 요금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웰다잉문화조성과<br>인식개선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·완화의료</li> <li>○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신청문화조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여성 분야

- 광주지역 여성 대표성은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개선됨
  - 광주시 지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이 2015년 28.7%에서 2020년 33.6%로 4.9%p 증가하였음
  - 행정 분야에서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5년 13.2%에서 2020년 27.8%로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, 이는 전국 평균 20.8%보다 7%p 높은 수준임
  - 광주지역 여성 정치참여 역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, 2022년 여성의원 비율은 시·구회의 모두 66.7%로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
- 광주지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M자곡선이 유지되고 있으며, 전체 비취업여성 가운데 2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으로 나타남
  -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취업연계 및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분절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, 2021년 기준 15-54세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(17.4%)보다 높아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은 2021년 기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 41.9%, 남성 30.2%로 안전에 대한 민감성과 요구도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
  - 2015년 여성 75.3%, 남성 62.7%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
  - 1인가구, 청년여성 등 안전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을 유지·강화하는 방식의 특화 프로그램 필요

<제2기 광주시 여성 분야 추진과제 종합 체계>

| 추진목표                  | 핵심과제                     | 세부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양성평등과<br>여성의<br>안전한 삶 | 여성의<br>참여권<br>확대         | 지역 여성 대표성<br>제고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역정당 네트워크 활동</li> <li>○ 여성 4급 이상 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점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원회 여성참여 및<br>시민여성위원 활성화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관리</li> <li>○ 여성위원 신규 발굴 및 여성 DB 등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성별<br>고용차별<br>개선         | 성별임금격차<br>모니터링 강화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종별·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</li> <li>○ 특정계층 취업 성차별 요인 연구</li> <li>○ 여성고용개선 환경자금 이용 활성화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정규직 여성노동자<br>노동환경 실태조사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 공단 비정규직 여성 노동환경 조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이<br>안전한<br>도시환경<br>조성 | 여성1인가구<br>안전지원정책 강화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성1인가구 방법예방기준 마련</li> <li>○ 여성1인가구 안전시스템 시범사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도시계획<br>성별영향평가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광주광역시 2030 도시기본계획 성별 영향평가</li> <li>○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성별영향평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친화마을<br>안전시스템 강화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성친화마을 대상 물리적 안전시스템 강화</li> <li>○ 마을만들기 안전시스템 확산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폭력<br>걱정없는<br>삶 실현     | 여성폭력 예방 교육<br>및 네트워크 강화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내실화</li> <li>○ 공공기관 및 기업대상 폭력 예방교육 강화</li> <li>○ 여성폭력예방 인식변화 위한 교육확대</li> </ul>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<br>교육 및 환경정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을단위 여성폭력 없는 안전 마을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○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활성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폭력 피해자 사후<br>처리 및 자립시스템<br>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폭력 피해자 대상 지원강화</li> <li>○ 폭력 피해자 대상 경제적 자립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이주민 인권 분야

-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,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40,480명임
- 특히 광산구는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집중거주지역(인구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% 이상 거주지역)으로 분류되고 있음
- 이주민 유형별 거주 현황을 보면,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 중 외국인근로자 6,392명, 결혼이민자 3,723명, 유학생 5,576명, 외국국적동포 3,223명이며, 한국국적 취득자 3,483명, 외국인주민자녀 6,424명임

<광주광역시 이주민 거주 현황>

| 구분  | 합계     |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|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| 한국 국적 취득자 | 외국인 주민 자녀 (출생)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| 소계              | 외국인 근로자 | 결혼 이민자 | 유학생   | 외국 국적 동포 | 기타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합계  | 40,480 | 30,573          | 6,392   | 3,723  | 5,576 | 3,223    | 11,659 | 3,483     | 6,424          |
| 동구  | 2,652  | 2,244           | 183     | 163    | 1,003 | 93       | 802    | 137       | 271            |
| 서구  | 3,656  | 2,316           | 466     | 503    | 149   | 241      | 957    | 470       | 870            |
| 남구  | 3,129  | 2,028           | 220     | 414    | 510   | 147      | 737    | 336       | 765            |
| 북구  | 8,911  | 6,113           | 776     | 1,022  | 1,694 | 360      | 2,261  | 938       | 1,860          |
| 광산구 | 22,132 | 17,872          | 4,747   | 1,621  | 2,220 | 2,382    | 6,902  | 1,602     | 2,658          |

### ○ 개방과 포용의 인권 공동체 구축

- 일방향적인 사회통합 패러다임(이주민 지원센터 운영, 지원 서비스, 운영 지원 등 이주민 적응 지원)에서 쌍방향적이고 상호공존의 패러다임 구축으로 전환

### ○ 광주형 이주민 인권체계 구축

- 이주민은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이주민 인권체계 구축이 필요함. 광주광역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‘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’ 제정, ‘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’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,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

<이주민 분야 추진과제 종합체계>

| 추진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핵심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주민인권<br>역량강화와<br>포용·공존<br>의 공동체 | 지역공동체의<br>인권감수성 증진                   | 이주민인권 이해<br>교육과 역량 강화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포토보이스(Photovoice)를 통한 이주민인권 이해 교육</li> <li>○ 이주민인권 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견, 혐오, 차별의<br>치유를 위한 인문학적<br>소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주민·선주민의 치유의 인문학 강좌</li> <li>○ 이주민인권 독서 모임 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당당한 노동과<br>건강한 삶의<br>권리 보장           | 이주민의 노동권<br>보호와 권리 강화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주민의 노동 법률 상담 및 강좌 운영</li> <li>○ 쉼터, 문화 향유 시설 구축 및 여가활동 지원</li> </ul>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주민의 건강권<br>증진과 보건의료<br>서비스 강화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주민의 건강과 의료 문해력 향상 교육</li> <li>○ 미등록 이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기관 정보 제공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주배경<br>아동·청소년의<br>권리 보호와<br>역량 강화   | 이주배경 아동의<br>돌봄 서비스 강화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센터 등 이용 실태 파악</li> <li>○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 파악 및 지원</li> </ul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주배경 청소년의<br>교육 역량 강화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</li> <li>○ 이주배경 청소년의 꿈&amp;진로 캠프</li> </ul>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주민<br>인권증진을 위한<br>‘광주형’<br>통합시스템 구축 | 이주민 인권 네트워크<br>구축 및 운영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주민 지원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</li> <li>○ ‘광주이주민정상회의’ 개최</li> </ul>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주민 통합지원<br>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주민 총괄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</li> <li>○ ‘광주이주민포털’ 구축 및 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

## 아동·청소년 분야

- 재난, 아동학대,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의 최우선 안전 보장 강화
  -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,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안전,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안전등이 최우선으로 보장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구
- 아동·청소년 성건강권 증진 및 교육 확대
  - 10대 청소년 성매개 감염병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2014년 9,622건에서 2018년 12,753명으로 41%증가함에 따라 (질병관리청, 청소년건강실태조사) 청소년 성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, 예방, 건강보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
- 취약계층 아동보호체계 및 사각지대 아동 발굴·지원 확대
  -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지원방안이 요구됨
- 아동·청소년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민·관·학 거버넌스 구축
  - 따라서 아동·청소년의 인권이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실효성있는 정책조정이 요구되고 있음. 이를 통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불균형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서비스접근 및 정보접근 가능성 높여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에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·관·학 상호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
- 광주다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·청소년 발달권 및 교육결손 해소
  - 24시간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기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초등아동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, 마을돌봄공동체와 함께 방과후 과정에서 종일제 운영 제도 등을 도입
-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차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
  - 광주지역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이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차별문화 개선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

<아동·청소년 분야 추진과제 종합체계>

| 추진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핵심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동<br>최상의<br>이익이<br>실현되는<br>인권친화적<br>광주 | 아동·청소년<br>지역사회<br>참여 및<br>자기결정권<br>강화 | 아동·청소년<br>마을자치협의회<br>설립 및 운영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을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</li> <li>○ 워크숍 및 찾아가는 자치학교</li> <li>○ 열린 의제 발굴 및 공유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·청소년<br>참여소통방<br>‘동행게시판’<br>운영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참여소통방 ‘동행게시판’ 운영</li> <li>○ 정책 청원 및 온라인 투표제 실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·청소년<br>건강한<br>성장 지원                | 아동·청소년<br>놀이문화<br>확산사업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놀이권 인식개선 캠페인</li> <li>○ 놀이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담기구 구성</li> <li>○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및 유아숲체험원 확대</li> </ul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·청소년<br>여가·문화·체육<br>활동<br>지원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동아리 공모 및 지원</li> <li>○ 문화예술동아리 축제 개최</li> <li>○ 청소년 힐링카페 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리상담지원 확대<br>및 미디어 과의존<br>치료지원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지원 온라인서비스</li> <li>○ 스마트쉼센터 이용자 확대 및 상담 지원</li> <li>○ 아동·청소년 디지털 기본법 조례 제·개정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·청소년<br>성건강권 증진<br>교육 및 보호 강화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·중·고 성교육 안정적인 시수 보장 및 확대</li> <li>○ 초·중·고 성교육 교재 개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디지털<br>전환교육<br><br>균등한<br>학습권 보장      | 디지털미디어<br>학습격차 완화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균등한 정보인프라 환경 구축</li> <li>○ 디지털미디어 활용 교사 역량 강화 교육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대면사회<br>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관리체계 구축</li> <li>○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및 시민인식 개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츄츄한<br>아동보호체계<br>강화                   | 학대피해아동쉼터<br>주거지원 강화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호대상아동 주거실태 조사 연구</li> <li>○ 보호대상 아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 및 감염병<br>대응력 체계화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난·위기 대응 통합매뉴얼 개발</li> <li>○ 현장 대응 안전체험 확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호종료아동<br>자립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</li> <li>○ 전담 사회복지사 1:1 지원 연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

##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

### 공간권

#### ① 추진방향

- 광주시에서 새롭게 건축되고 재생되는 공간은 ‘모두를 위한 도시공간’을 지향하고,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에 기반해 설계
-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생산하고, 재생하는 모든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, 도시공간을 개발

#### ② 추진과제

-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-유니버설 디자인 추진
  - 유모차/장애인/여행객 등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이나 디자인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 설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‘유니버설 도시디자인위원회’ 운영
  - 공간의 민주화, 공간의 평등성, 공간적 복지를 생활공간 속에 구현하는 광주만의 유니버설 디자인 실현
  - 무장애 도시를 위한 BF인증 확대해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·지역을 접근·이용·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·설계·시공·관리
  - BF 인증은 도시공간에 대해 누구나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인 기관이 인증하는 것으로 도시의 안전성과 사적 통합성을 보여주는 평가지표로 활용
  - 생활공간에서 무장애 시설 확대하기 위해 무장애 정류소, 무장애 숲길 산책로, 무장애 놀이터 등을 확대 조성
- 도시공간 및 안내물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
  - 도시공간 시민 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시설 안내문, 표지물 및 홍보물 등에 대한 인권인지적 검토 및 개선
- 도시개발, 재생, 정비 사업 등에 시민참여권 보장
  - 도시계획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 개선, 알기 쉽고 편리한 도시계획 정보 제공, 법정계획 심의 시 시민참여 요건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

## 안전권

### ① 추진방향

-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 중심의 안전 인프라 정책을 넘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
- 광주시민이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

### ② 추진과제

- 재난과 위험 대응 기반 강화
  - 광주시 위기관리 매뉴얼 및 관련 조례 종합 진단,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, 지역축제 행사 대상 ‘안전관리 매뉴얼’ 준수 사항 점검 등
  - 재난약자를 위한 안전포털시스템 개발 및 구축해 재해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
- 재난 피해자 및 가족 지원 강화
  - 재난 발생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건강과 물질적 안정을 위해 보호 조치와 지원책 마련
-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
  - 시민참여형 재난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, 실무기구로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 구성 해서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및 광주시민안전교육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동 강화
- 기후변화 재난/재해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
  - 재난안전사고 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, 재난취약가구 대상 전기, 가스, 소방분야 안전점검 강화,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재난상황을 대비한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강화
- 공사장 주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  -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과 공사장 주변에 행인들의 안전을 담당할 지도원 배치 의무화
  - 건축 및 공공인프라 공사시작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자문 활동 활성화

## 문화권

### ① 추진방향

- 문화권에 기반해 시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필요하며, 이러한 권리를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
- 광주시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양한 구성원의 공존을 해치며, 타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혐오 차별의 배경, 그리고 차이를 기반으로 서로 공존하는 사회통합 지향

### ② 추진과제

- 문화활동 공유지와 다양한 생활권 문화공간 확대
  -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속 문화공간과 네트워크 공간 확보
  - 마을공동체 기반 생활문화 공간(아트벙커) 조성, 아트벙커는 마을별 자원과 특성에 맞는 장소를 지정하여 주민 주체의 생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
- 문화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
  - 생활문화복지 전담 인력 등 문화활동의 향유와 창조적 활동을 연계하는 문화 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인재의 교육 및 양성
- 문화시설 최소 운영시간 보장
  - 시민의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해 지역내 주요 공공문화시설(공간)의 야간 운영 시간 확대 및 탄력적 개방 운영
- 디지털문화 플랫폼을 문화서비스 제공
  - 디지털 기반 시민 문화향유권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문화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적 문화정책 모델 개발
- 성소수자 인권보호체계 구축
  - 소수문화와 소수성 등을 편견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,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내는 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증진 정책의 주요 대상
  - 성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
-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확대
  -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,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

## 환경권

### ① 추진방향

- 미세먼지 농도, 황사문제, 대기 오염 문제 등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권기반의 환경정책 확대
- 자치구, 마을 등 지역단위로 공원이나 휴식공원을 늘려 도시전체에서 친환경 녹지공간 비율 확대
-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를 위해 탄소저감을 실현하는 도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, 사람, 자연, 동식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

### ② 추진과제

- 탄소흡수원 확대 사업 지속 추진
  - 도시 숲 확충 및 가로수 식재 확대,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과 탄소 흡수원을 확대
  - 탄소중립 마을 공동체 활동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해 공동체 단위에서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 정착
  - 편리한 자전거 교통환경과 전기 수소버스 등 친환경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확대
-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예산 확대
  - 탄소인지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, 조례 제정 및 예산서 작성
- 폭염 및 혹한 대비 시민의 건강권 보장
  - 주야간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, 마을단위 생활복지 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활용
- 기후변화 대비 건강 피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
  -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가 원인인 질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병 매개체 조사를 통한 기후변화 감염병 감시 강화
-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
  -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, 동물복지 의식 향상 등에 따라 동물 복지권에 동물보호와 복지 시설 조성 필요

## 정보인권 및 알권리

### ① 추진방향

- 도시의 모든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
- 디지털 정보격차가 경제, 사회, 문화적 격차로 확산하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

### ② 추진과제

-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
  -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실질화
  -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사업 마련
-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
  -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분야 담당자 교육
  -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
- 인공지능(AI) 발전에 따른 인권보호
  -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인권보호 기준 마련
  -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
-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
  - 기관별로 분산된 디지털 배움터,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의 교육자료 등 디지털 교육 자원을 통합해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허브 구축
  -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안내하고, 디지털 기술을 인권적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

### 3

##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

### 인권문화 확산

#### ① 추진방향

- 인권마을의 경우 2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진하여 2기 기본계획을 계승필요
- 인권마을이 마을 내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되고 주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이 실천되는 운동과 과정으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,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, 마을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
- 시민들의 인권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및 교육,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로 ‘시민들의 생활 속 인권감수성 향상’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교육사업 중심이 아니라 인권문화 확산이나 시민 스스로 인권정책을 발굴하는 경로 사업으로 전환 필요
- 특히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의 경우 매년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, 그 결과물에 대해 지역 내에서의 확산이나 인권정책으로 입안되는 사례가 없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
- 시민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‘광주人꽃지기’를 적극 활용해 생활 속 인권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시민들의 자발적 인권프로젝트를 지원

#### ② 추진과제

- 인권마을 가이드라인 마련
  - ‘인권도시 가이드라인 TF’ 구성하여 인권마을에 필요한 기본원칙, 필수요소, 실행구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
- 인권마을 중장기 로드맵 작성
  - 현재 인권마을은 장기 참여 마을과 초기단계 마을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고 마을의 사업 기획역량도 각기 다른 상황이며, 매년 신규마을이 진입

- 인권마을 초, 중, 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과 방법, 각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영역 등을 구분해 ‘인권마을 중장기 로드맵’을 마련
- 인권마을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일정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신규 마을 선정 기준도 사업 기획역량이 아니라 마을의 자치역량과 주민 자력화 등에 초점

#### ○ 인권단체협력사업 결과 환류 체계 마련

- 기본적으로 인권단체협력사업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
- 인권단체협력사업 수행 과제 중 정책 과제로 입안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류 체계 마련하고, ‘인권증진시민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정책 권고 형태 제안

#### ○ ‘광주人꽃지기’ 생활 속 모니터링 기능 강화

-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‘광주人꽃지기’의 활동력을 강화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속 모니터링 활동으로 전환
-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시설, 홍보물, 광주광역시 주최 행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, 활동에 대한 일정한 수당 지급 체계 마련

#### ○ 시민 인권프로젝트 및 인권단체 성장 지원

- 지역의 전문적인 인권활동가나 인권 NGO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 연구나 인권 활동 동아리 결성과 활동 지원
- 인권을 주제로 하는 인권문제 발굴, 실천활동, 조사 및 연구, 캠페인 등의 활동에 시민 개인, 그룹 또는 동아리 형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 공모
- 지속성 있고, 역량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인권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

#### ○ 인권문화 홍보 강화

- 2013년부터 시작된 ‘인권작품 공모전’을 통해 매년 생산된 표어, 포스터, UCC 또는 광주인권헌장, 인권옴부즈맨 제도 등을 인권 홍보물로 활용
- 광주 지역 내 활용 가능한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권도시 광주의 홍보, 인권 문화의 확산에 활용
- 지역 내 방송국과 연계해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특정 인권 분야와 관련한 캠페인 진행

## 인권정책 민관협력체계 내실화

### ① 추진방향

-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권정책연석회의,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등 지역의 유관기관, 전문가, 인권활동가,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의 실효성 강화
- 인권행정의 기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강화되어야 하며,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
- 인권정책들이 기존의 시민참여 기구를 통해서만 공유가 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, 직접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경로 필요
- 지역사회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인권실천 역량 결합
-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참여에 의한 인권의 주체화, 인권 교육 등을 포함한 인권문화 형성

### ② 추진과제

#### ○ 인권정책 민관협력체계 내실화

- 인권정책연석회의,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,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협력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
- 인권골든벨,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등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 모색

#### ○ 인권정책 업무 설명회 개최

-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인권업무 설명회를 개최해 연간 사업과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음
- 매년 초 지역 내 인권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가 설정한 인권정책 연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를 정례화
-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,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

#### ○ 인권정책 원탁토론회 운영

- 매년 하반기에 인권정책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차기년도에 집중해서 논의할 인권 분야 또는 정책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인권정책 TF 구성

## **광주 인권교육 협의회 구축**

### **① 추진방향**

-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‘광역시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’ 보고서에서의 제안사항 반영
- 광역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방안으로 ▲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 전문가의 영입과 배치 ▲모니터링과 평가의 강화와 ‘기획-수행-평가-기획’의 나선형 구조 체계 확립 ▲공통 인권교육과 직무기반 인권교육의 이중적 체계 구성 ▲교육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중층적인 전개방식 체계화 ▲공무원교육원 신입교육과 승진교육 내 인권교육 반영 ▲공무원교육원 정규강좌로 직무기반 인권교육 과정 개설
-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역 단위 인권교육협력체를 구성 필요

### **② 추진과제**

- ‘광주인권교육협의회’ 구성
  - 인권교육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서는 인권교육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, 시청-교육청-자치구-지역단체 등을 포함하는 협력 기구로 ‘광주인권교육협의회’ 구성
- ‘인권교육 인증 과정 등록제’ 실시
  - 인권관련 강좌, 토론회,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‘인권교육 인증 과정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- 광주형 인권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
  - 지역 내 인권교육 현황, 인권교육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, 이행체계,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

## **지역대학 인권교육 지원**

- 대학 인권교육 지원
  -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MOU 체결해 교양과목에 인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도록 협력 지원

## 인권영향평가제도 강화

### ① 추진방향

- 인권영향평가는 정책, 제도, 사업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와 영향을 미리 검토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속적인 운영 필요
- 인권영향평가단 구성을 위해 전문가, 이해당사자,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필요
-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건축물 설계(공모) ‘과업지시서’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기본계획,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등 진행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지속적으로 진행
- 기후위기, 재난 등 사회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,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공시설 신축의 경우 인권영향평가 적용 대상 확대

#### < 우리시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황 >

- 인권 조례 개정(인권영향평가 대상·절차 반영) : 2017. 7.
-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인권영향평가 실시
  - 2018년 17건, 2019년 97건, 2020년 135건, 2021년 175건, 2022년 121건
-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
  - 빛고을 안전체험관(2018.3.~2019.3.), 하남시립도서관 및 장애인수련시설(2020. 3.)
- 지방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
  - 제7회 지방선거(2018. 4. 13.~19.), 제8회 지방선거(2022. 5. 26.)
- 공공기관 주관 행사 인권영향평가 실시
- 사회복지시설 규정·편람 인권영향평가 실시

### ② 추진과제

-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
  - 인권영향평가 내용, 인권영향평가 범주, 인권영향평가 과정, 인권영향평가 방식 등을 포함한 운영 매뉴얼 작성
- 위험사회 관련 인권영향평가 대상 확대
  - 기후위기, 재난, 신기술 도입 등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대상 확대

## 인권지표 수정·보완

- 현황 : 우리시 인권지표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성·운영
  - 정성평가 구성항목은 인권의식(인권에 대한 이해), 인권인식(인권상황에 대한 인지), 인권경험(인권상황에 대한 차별침해 경험), 인권평가(인권상황 개선도 평가)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

### <광주시 인권지표 구성 현황>

| 인권지표 5대 영역             | 지표수       | 하위지표수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계</b>               | <b>51</b> | <b>73</b> |
|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   | 6         | 9         |
|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      | 12        | 15        |
| ③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| 16        | 23        |
| ④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      | 9         | 12        |
|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    | 8         | 14        |

- 현재의 인권지표는 인권 현황 파악과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나 준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
  - 인권 현실이나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인권지표 존재
  - 인권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내 과제와 사업이 인권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차원의 실효성이 낮음
- 개선방향
  - 인권지표는 그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관리와 운용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, 인권지표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황지표와 정책지표를 명확하게 구분
  - 현황지표도 사회적 약자 관련 현황지표와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현황지표로 구분해 운용
  - 인권지표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권정책의 과제 및 사업과 인권지표가 직접적인 연계 필요
  - 이를 위해 인권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주요 사업의 핵심 내용과 사업 목표 등을 고려해 인권정책지표를 별도로 구성

## **인권행정 협의체 구성·운영**

- 종합행정 성격을 갖는 인권행정을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광주시 각 부서가 참여하는 ‘광주시 인권행정협치회의’를 구성 및 운영
- 협치회의는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, 인권 관련 단위 사업 추진, 사업의 평가 등을 해당 실무 부서가 협력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협치 창구
-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과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, 추진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며, 과제의 성격에 따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

## **시-자치구간 인권행정 협의회 구성·운영**

- 광주시-5개 자치구 인권행정협의회 운영
  - 시청 인권부서와 5개 자치구 인권부서 간의 인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구 단위에서도 인권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
  - 시청-자치구 사이의 인권담당자 회의를 안정화·상시화 하는 차원에서 ‘광주시-5개 자치구 인권담당자 협의회’ 구성 운영

## **인권지원센터 설치**

- ‘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’에 따라 인권정책 개발 및 집행,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“인권지원센터” 근거규정을 둠
- 市 민주인권과는 인권행정을 총괄하고, 인권행정의 과제들이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과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, 반면에 인권정책의 개발,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시민사회로의 확산은 인권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역할 분담체계 필요

### ① 추진방향

- 인권도시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인권정책과 인권도시 네트워크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외적으로 인권정책 재활성화
- 국제적으로는 기후위기, 전쟁, 인플레이션 등 인권을 위협하는 지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권담론을 창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 협력 사업 확대
-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확충

### ② 추진과제

- 국내 인권도시 및 인권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대 활동
  -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, 인권관련 행정부서 폐지 및 축소 등으로 지역단위 인권 정책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권도시운동과 인권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심적 역할 수행
  - ‘광역인권도시협의회’ 활동을 정례화하고 인권정책의 교류 및 공동 활동 기반 마련
  - 시청 차원에서 지자체 인권정책을 지원하고 국내외적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협력의 장 마련
- 국내 인권도시 연대회의 구성 운영
  -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역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가 ‘인권도시 연대회의’를 구성 하여 공동의 정책 발굴 및 공동 추진
  - 인권도시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,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을 활용해 정기회의나 정책 포럼을 별도의 세션으로 운영
-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한 지구적 차원의 인권담론 확장
  -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인권담론의 확산과 인권도시 간 연대의 구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
  - 기후위기와 인권 등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공동의 실천 의제와 규범을 제정한 후속 작업 진행

## ○ 세계 지방정부 공무원 인권교육 플랫폼 구축

- 2021년부터 ‘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’를 구축해 세계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권정책 개발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플랫폼 구축
- 세계인권도시포럼 통해 확보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인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정책 교육 전문 플랫폼 구축
-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(UN OHCHR), UCLG,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등 국제 기구 및 단체들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강의 개발,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듈화, 인권정책 자료 아카이빙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
- 우리시는 광주국제교류센터 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

## ○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 사업 확대

- 광주시는 인권도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‘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’ 공동 의장과 ‘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’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
-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확보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확대
- 유네스코 본부와 함께 진행한 ‘포용도시 지표 개발 사업’ 이후 후속 사업인 포용 도시 시범도시사업 등을 유네스코 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등과 공동 추진

## ○ 국제 인권도시 네트워크 운영 기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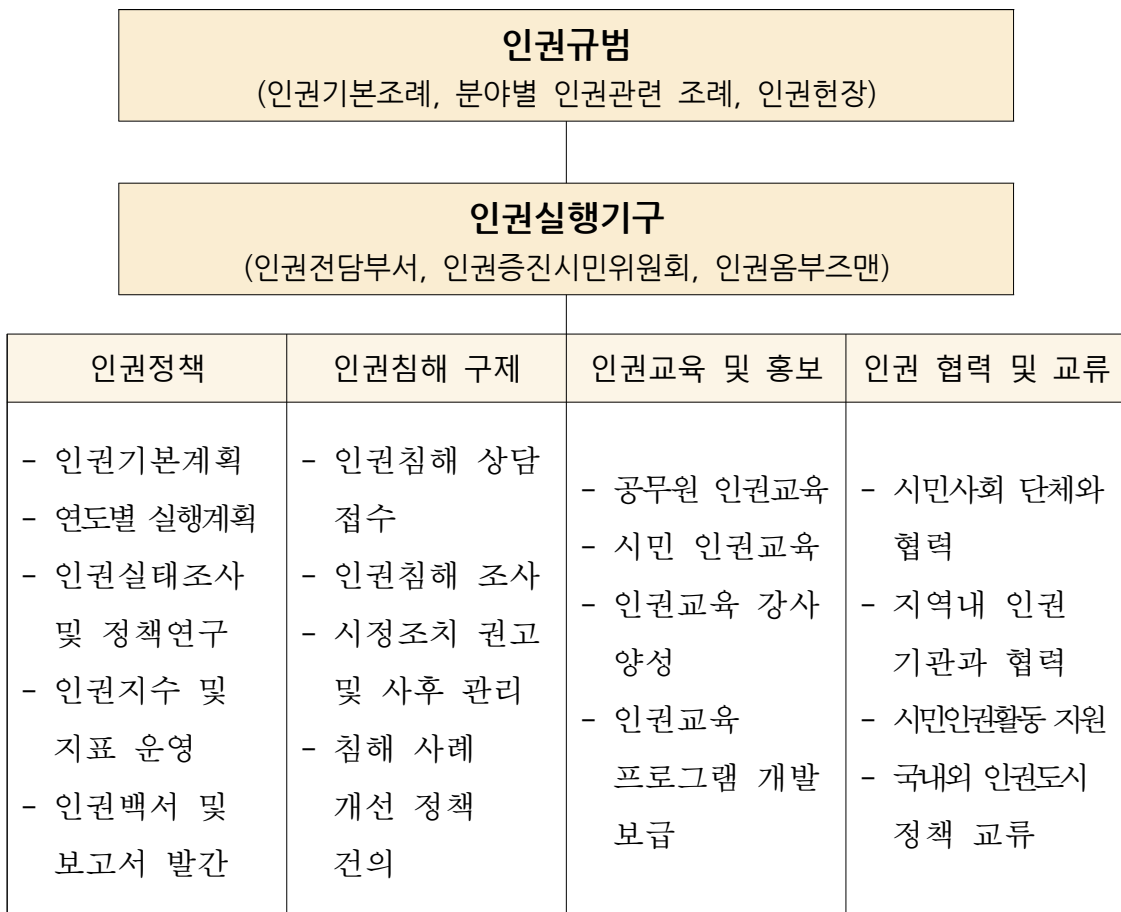
-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인권도시포럼, 국제 인권협력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
- 우리시 차원의 인권도시 네트워크 확장 및 운영에 관한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 필요

## V 인권도시 추진체계 구축

### ① 지역단위 인권행정 거버넌스 구축

- 인권도시를 위해서는 일상의 생활방식, 규범, 관습, 도시정책, 도시공간 등이 인권의 가치와 부합되도록 해주는 종합적인 틀이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장치인 인권체제 구축
- 인권도시의 인권체제는 인권조례, 인권헌장 등과 같은 규범적 장치를 마련하고, 인권전담 행정부서와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등과 같은 인권실행기구를 설치하고, 인권실태조사·인권정책 추진·인권교육·인권침해 구제, 인권 교류 활동 등과 같은 인권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련의 인권제도와 정책적 실천들로 구성

#### <광주지역 인권체제 구성 요소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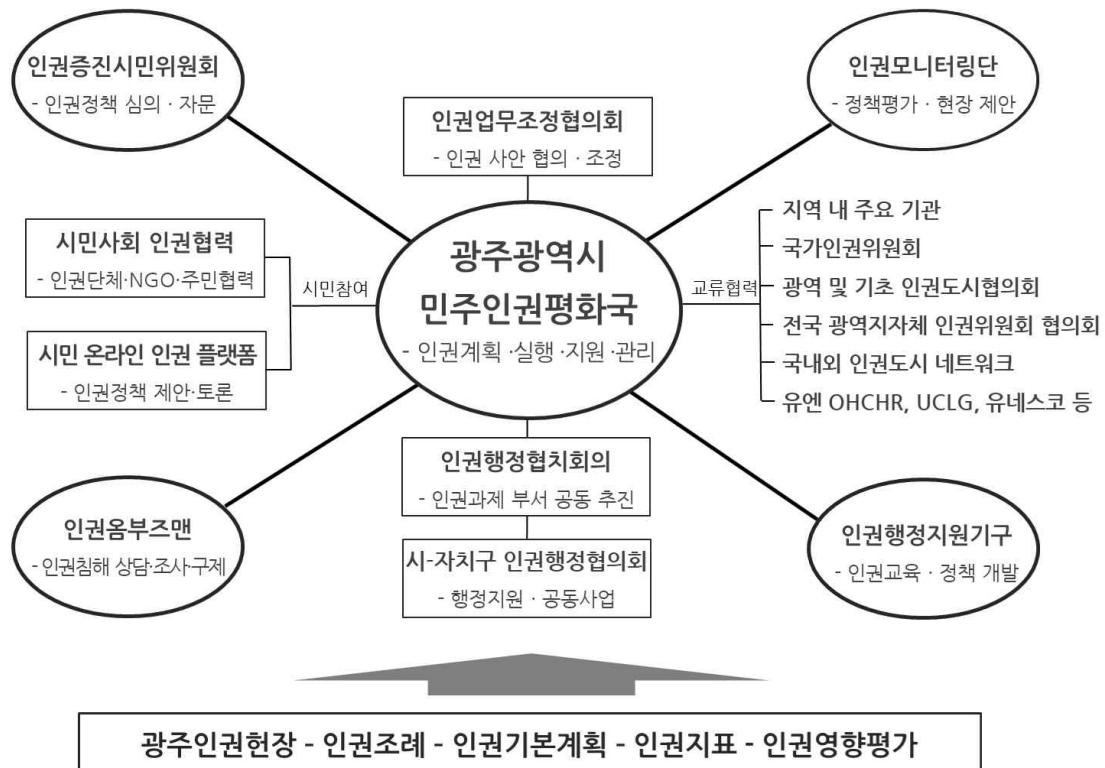


## ② 인권도시 광주 추진체계

○ 인권도시 광주에서 인권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행정, 시민, 제도, 장치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는 추진체계 구축

-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원한 인권평화협력 관실,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·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, 인권 침해 조사·상담·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옴부즈만 등 현재의 장치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권행정지원기구, 인권 정책의 평가를 담당할 인권정책 모니터링단 등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

### <우리시 인권정책 추진체계>



○ 우리시 인권기본계획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인권전담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하고,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조직적 위상 확보

- 인권전담부서 기능과 역할은 인권거버넌스 기구인 인권증진시민위원회, 인권정책 지원 기구인 인권지원센터 등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정책의 확대·강화 지향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